

### 3. 미군정기의 한국화교사회: 미군정 · 중화 민국정부 ·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왕은미(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박사과정)

- I. 서론
- II. 미군정과의 관계
- III. 중화민국정부와의 관계
- IV. 한국인과의 관계
- V. 결론



미군정기는 한국화교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진한 상태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군정기 한국화교를 둘러싼 세 가지 환경, 즉 미군정·중화민국정부·한국인을 중심으로 당시의 한국 화교사회를 재조명해보는 것이다. 미군정과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화교가 연합국 국민의 대우를 받고 있었으며, 미군정이 대일무역을 배제하자 대중국무역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화교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중화민국정부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해방 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는데 남한의 화교사회는 급속도로 중화민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대회'를 통한 한국화교의 국내정치 참여와 주한총영사의 화교 자치구조조의 편성으로 화교사회를 조직적으로 통합해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은 화교의 경제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화교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척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화교에 대한 정치적 이미지와 경제적 이미지의 분리는 한국정부수립 후에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화교, 한국화교, 화교사회, 미군정, 중화민국정부, 중국, 한국인,  
중국인, 냉전, 한중관계

## 1. 서론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소규모 중화음식집을 경영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화교와 같은 경제력은 없다. 그들은 한국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와 관련된 연구도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 인권문제와 다문화주의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화교 연구가 다수 선을 보이고 있다.<sup>1)</sup> 그러나 한국화교 연구는 아직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한국내의 가장 체계적인 한국화교 연구로는 박은경의 『한국화교의 종족성』(한국연구원, 1986)을 들 수 있다.<sup>2)</sup> 그러나 박은경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기 시기의 한국화교<sup>3)</sup>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1) 양필승, 2000, 「한국 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인권법』, 제3호; 장수현, 2001,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 제4호; 왕춘식, 2002, 「한국 화교 2세의 절곡과 소망」, 『당대비평』, 제19호 2002년 여름호; 장수현, 2002,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 제19호 2002년 여름호; 오명석, 「화교 교육과 젊은 세대의 문화적 감성」, 『당대비평』, 제19호 2002년 여름호; 이윤희, 2004, 「동북아 시대 인천 거주 화교의 인권 실태 및 정체성」, 『담론201』, 제6권, 제2호; 이재광, 2004, 「한국화교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화교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30집 등.

2) 박은경은 한국화교 역사를 이주가 시작된 19세기말부터 1910년까지를 형성기로,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부터 1945년을 전성기로, 해방 후 1945년부터 1970년대를 정착기로, 화교의 해외 이민이 활발해진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이동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박은경의 박사논문 「화교의 정착과 이동: 한국의 경우」(이화여자대학박사논문, 1981)를 토대로 한 이 책은 한국화교연구의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박은경의 연구 이후 한국에서 화교 연구는 석사논문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에서 거론한 논문 등 다수의 잡지와 논문에 선을 보이고 있다. 박은경의 책이 한국에서 발간된 유일한 한국화교 관련 연구서였으나, 최근 양필승·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경제의 어제와 오늘」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한국화교 연구성과가 잘 반영되어 있다.

접근을 하지 못했다. 이 시기는 한국화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부진한 상태이다. 이 시기의 한국화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분명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한국화교의 모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화교를 둘러싼 환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 환경을 형성한 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화교가 거주하는 남한의 통치자인 미군정, 한국화교의 조국인 중국, 그리고 호스트 국민인 한국인이다.

이 글에서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국화교를 둘러싼 세 가지 환경, 즉 미군정·중화민국정부·한국인과 화교의 관계 검토를 통해 당시의 한국화교사회를 다원적인 각도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식민지시대 말기에 위축되었던 한국화교의 경제는 해방과 더불어 크게 확장하게 되는데, 당시 한국화교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조선은행조사부의 「재한화교의 경제적세력」(『경제년감』, 1949)이 중요시되고 있다.<sup>4)</sup> 이 시기 한국화교의 경제세력의 확대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다.<sup>5)</sup> 그러나 이정희의 「해방이후 한국화교 자본 축적과 그 의의(1945.8~1949)」(한국경제공통학술대회발표논문, 2001)는 그보다 더 나아가 한국화교의 경제성장의 원인을 미군정과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sup>6)</sup> 이정희의 글은 한국화교의 경제성

3) 이 글에서는 해방 후 1945년부터 한국정부가 수립하기 전인 1948년까지를 연구시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직 국가로서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한국화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편의상 이 시기의 조선 남쪽을 '한국' 또는 '남한'이라 칭하고,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의미할 때는 '조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의 거주하는 화교를 '한국화교'로 쓰기로 한다.

4) 이것은 보고서의 성격이 강해 연구논문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화교의 경제력을 경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당시의 한국화교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가장 많이 인용된 자료이기도 하다.

장과 미군정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화교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을 고찰한 것으로 그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그는 미군정이 화교를 연합국 국민으로 우대하며 귀속가옥의 불하를 실시하고 중국무역을 중시했던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미군정과 한국화교는 어떠한 관계하에 있었고 그것이 한국화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은 앞에서 거론한 이정희의 논문과 조선은행조사부의 보고서를 상당히 인용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두 번째 요소인 중화민국정부와 한국화교의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 이 시기는 한국화교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화교의 정치적 변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종결되고 냉전의 막이 오르면서 동아시아는 분단의 시대를 맞게 된다. 한반도는 미·소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할 점령되고, 남과 북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관계가 고착화해간다. 한국화교의 조국인 중국에서도 국공내전이 본격화하면서 분단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식민지시대까지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던 화교는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가 분할점령되면서 남한화교와 북한화교 두 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미군 통치하의 남한에서는 중화민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화교사회가 편성되어 가는데,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이 패배해 타이완으로 정부를 옮겨가

5) 慮冠群, 1956, 『韓國華僑的經濟』, 臺北: 海外出版社; 강덕지, 1973, 「한국화교의 경제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석사논문; 박은경, 1986; 楊昭全·孫玉梅, 1991,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등. 이상의 연구는 모두 조선은행조사부, 1949, 「재한화교의 경제적세력」, 『경제년감』을 바탕으로 미군정기의 화교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뒤에서 거론하는 이정희의 논문을 함께 인용하고는 있지만 선행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6) 이 글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이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이다.

도 그 지지는 변하지 않았다. 중화민국만을 조국으로 인정하는 한국 화교의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1990년대 말까지 유지되는데,<sup>7)</sup> 그 토대가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한국화교의 반공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중화민국정부 중심의 화교사회가 확립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한국화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중화민국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한국화교사회가 어떻게 중화민국정부와 밀접히 연결되면서 중화민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가는지를 밝히려 한다.

마지막 요소인 한국인과 화교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미흡한 편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중국·중국인 인식을 검토했다.<sup>8)</sup> 이러한 한국언론의 중국·중국인에 대한 보도를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화교)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필자 또한 미군정기의 신문 기사를 통해 한국인과 화교의 관계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7) 왕은미, 2004, 「동아시아를 떠도는 한국화교의 정체성: 『한중일보』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국가 정체성」, 정문길 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자성사 참조

8)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근대와 식민지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전인갑, 1987, 「1920년대 신문·잡지언론을 통해 본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성격: 5·30운동에 관한 東亞日報의 언론을 중심으로」, 『서울대동양사학과논집』, 제11집, 1987, 11; 백영서, 2000a, 「대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유인숙, 2002, 「근대 한국 소설에 투영된 중국·중국인」, 『중한인문과학연구』, 제8집, 2002, 6; 이재령, 2003, 「남경정부 시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일보』(1929-1935) 기사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15집, 2003, 6; 松田利彦, 2003, 「近代朝鮮における山東出身華僑: 植民地にける朝鮮總督府の對華僑政策と朝鮮人の華僑への反應を中心に」, 千田稔·宇野隆夫 共編, 『東アジアと「半島空間」: 山東半島と遼東半島』, 思文閣出版 등. 해방 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백영서, 2000b, 「1949년의 중국: 동시대의 한국인 시각」,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 비평사가 있지만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미군정기는 아직 분석대상이 된 적이 없다.

## 2. 미군정과의 관계

해방 후 미군은 한반도의 38도선 이하를 점령함과 동시에 최고 통치기관으로 자리하게 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화교 또한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 장에서는 미군정과 화교의 관계를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싶다.

### (1) 정치적 측면

1945년 10월 미군 점령지역내의 민간업무에 관해서 국무·육군·해군의 삼성조정위원회가 한국의 미군최고사령관에게 보낸 「한국의 미군 점령지역내 민간 행정업무에 대하여 태평양방면 미군최고사령관에게 보내는 최초 기본 훈령」(SWNCC176/8)에는 미군의 한국 정책의 기본방침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한국이 “미·영·중·소에 의한 신탁통치”를 받아 한국의 독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sup>9)</sup> 여기서 중화민국이 연합국의 회원국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중화민국이 연합국이라는 것은 중화민국 국적을 소지한 한국화교 역시 연합국 국민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정부는 「SWNCC176/8」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으로써 연합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미국무성, 1984 : 90)

9) 「SWNCC176/8」에 관해서는, 미국무성, 1984, 『해방 3년과 미국』, 돌베개, 84-103쪽에 한국어 번역이 수록돼 있다. 「SWNCC176/8」에서 언급된 대한정책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미국의 대한 정책, 즉 지금과 같은 미·소의 민간행정 업무 담당이라는 초기의 과도적 단계로부터 미·영·중·소의 신탁통치로, 그리고 마침내는 국제연합 회원국 자격을 갖춘 궁극적인 한국의 독립에 이르는 점진적인 발전을 상징하고 있는 대한정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p.85)

## 8. 전쟁포로, 국제연합국 국적자, 중립국 국적자 및 기타

- a. 귀하는 연합국측 전쟁포로의 보호 및 송환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 c. (……) 일반적으로 연합국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보장하며 그들이 원할 경우 즉각적인 송환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d. 군사적 상황에 따라 규정되는 한계내에서 귀하는 연합국 및 그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1945년 9월 7일에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인 맥아더도 한국에서 「포고 제2호: 범죄 또는 법규 위반」을 발표해 연합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무부 치안국, 1956: 2)

“항복문서의 조항 또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하에 발한 포고, 명령, 지휘를 범한 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 자,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율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 (밑줄은 인용자)”

이렇듯 미국은 연합국 국민의 건강·복지·재산을 보호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에 서술한 「SWNCC176/8」 8조의 본국 귀환을 희망하는



연합국 국민을 신속히 귀환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미군정은 중국인 귀환업무를 시작했다. 1945년 12월 29일부터 인천항에서 미군정에 의해 중국인이 귀환되기 시작해, 1946년 말까지 1,531명이 귀국했다.(이정희, 2001 : 2) 1948년 5월까지 귀국한 중국인의 수는 총 1,940명이다. 귀국을 희망한 중국인 중에는 식민지시대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일시적으로 동원된 노동자와는 달리 화교는 이미 생활기반이 한국에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국공내전으로 정세가 불안정한 중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한국에 남아 그 기반을 활용하는 편이 화교들에게는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잠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군이 귀환시킨 중국인 중에는 왕징웨이(汪精衛)정권의 주조선영사관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왕징웨이정권 수립 후 조선에 있는 영사관을 접수해서 화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해방 후 미군은 일본에 협조적이었던 왕징웨이정권의 주조선영사관관원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중화민국정부 외교부 문서에 의하면 미군의 송환요청에 따라 영사관의 재산·정부문서·관원의 개인재산을 미군이 잠시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1946년 11월 27일 관원 11명과 가족 21명 등 총 32명이 부산에서 중국으로 송환되었다.<sup>10)</sup> 12월 2일에 상하이(上海)에 도착한 이들

10) 중화민국정부의 외교부 문서에 의하면 중화민국정부는 정부관원을 파견할 때까지 왕징웨이정권의 영사관원들을 미군이 억류해줄 것을 부탁했다. 정부관원의 파견이 늦어지자 영사관원들과 그 가족을 관리하고 있던 미군은 재정적인 부담을 느껴, 신속히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영사관의 재산·정부문서·관원의 개인재산을 미군이 잠정적으로 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중화민국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송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군이 관리하고 있던 왕징웨이정권의 영사관원과 그 가족들의 총수는 약 120명이었지만 32명만이 송환되었다. 그 후 다른 영사관원들과 가족들의 송환이 있었는지는 자료의 한계로 알 수가 없다. (『韓國僑務案 1946. 11-1948. 6』, 마이크로필름: 0663-0800) 송환 날짜에 관해서는, 「看板메고돌 야간汪政權 領事館」, 『동아일보』 1946. 11. 30 참조.

중 관원 11명은 상하이 고등재판소로 보내져 ‘한간(漢奸)’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가족 21명은 행정원선후구제총서상하이분서(行政院善後救濟總署上海分)에 수용되어 난민으로 처리되었다. (『韓國僑務案1946,11-1948,6』, 마이크로필름 : 0832-0845)

이와 같이 미군정은 한국에 있는 중국인을 연합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본국귀환에 관해서는 비교적 미국정부의 기본 방침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관해서는 충실히 수행되지 않은 면도 있었다.

해방 후 조선인이 중국에서 관료와 민중에게 고통과 피해를 받았다는 소문이 중국에서 귀국한 조선인에 의해 퍼져나가 조선인이 화교의 가게를 약탈하고, 화교를 폭행·살인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중화상회에 보고된 사건만도 200여건에 달한다고 『漢城日報』는 발표했다.<sup>11)</sup>

미군정은 중국인을 학대하는 조선인은 군정재판에 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sup>12)</sup> 미군정이 연합국 국민인 화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는 했지만 화교배척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끄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것은 중국측도 한국측도 마찬가지였다. 이 삼자의 공통된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왕지탕(王際唐)사건’이다.

왕지탕은 1946년 당시 중화상회 서기로 일하고 있었다. 1946년 11월초 귀환되는 중국인을 에스코트하여 중국에 귀국했다. <THE CHINA PRESS> 등의 신문은 왕과 상하이UP통신의 인터뷰를 토대

11) 「韓中親善에大憾事, 頻發하는對華人暴行」, 『漢城日報』1946,6,23.

12) 「처벌, 중국인을 학대말라」, 『漢城日報』, 1946, 2, 27.

로 “중국에서 귀국한 조선인의 선동으로 한국내 넓은 범위에서 중국인 배척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 항복시점부터 보고된 것만 해도 200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sup>13)</sup> 이것에 반발하여 중국에 체재하는 ‘한국대표단’은 한국에서 중국인배척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sup>14)</sup> 이에 왕은 중국 〈中央日報〉에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인배척사건은 결코 사실무근이 아니며, 중화상회와 전총영사관교무조(前總領事館僑務組)에 안건 등록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sup>15)</sup> 그러자 ‘한국대표단’은 중화민국외교부를 방문해 “왕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면 조선인이 중국에 있었을 때의 중국당국으로부터 악의적인 대우를 받았던 사실을 공표하겠다”고 말하자, 중화민국외교부는 왕이 다시는 그와 같은 언론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보유했다.(『韓國僑務案1946. 11-1948. 6』, 마이크로필름 : 0586-0588)

미군정도 “조선인과 화교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인했다.<sup>16)</sup> 화교배척사건이 200여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던 〈漢城日報〉도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sup>17)</sup> 이 사건은 장제스에게 까지 보고되었지만 한국화교를 보호하는 일에 중화민국정부는 소극적이었다. 중화민국정부는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화교배척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지만, 미군정이나 한국측에

13) 〈THE CHINA PRESS〉, 1946. 11. 3. (『韓國僑務案 1946. 11-1948. 6』, 마이크로필름:0590-0592).

14) 〈中央日報〉, 1946. 11. 8. (『韓國僑務案 1946. 11-1948. 6』, 마이크로필름: 0591- 0592 ).

15) 〈中央日報〉, 1946. 11. 12. (『韓國僑務案 1946. 11-1948. 6』, 마이크로필름: 0595).

16) 「華僑壓迫云云은浪說」, 〈東亞日報〉, 1946. 11. 20.

17) 「中國에虛傳된在韓華僑의處境」, 〈漢城日報〉, 1946. 11. 20.

항의하지는 않았다. (『韓國僑務案 1946. 11-1948. 6』, 마이크로필름: 0612)  
결국 중화민국정부는 왕지탕과 ‘한국대표단’의 김은총과 면담 후 양측의 오해가 풀렸다고 해석하고, 신속히 주한총영사를 파견해 화교를 보호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왕지탕사건’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당시에 화교배척사건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한국화교가 중화민국 정부에게 화교배척사건의 해결을 요구한 내용이 외교부문서에 기록돼 있다. 기록에 의하면 1945년에 조선인이 서울 화교 집에 침입해 총기를 발사하여 화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韓國僑務案 1948. 1-12』, 마이크로필름: 0878-0880) 1947년 전라북도에서는 조선인에게 폭행을 당한 화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교들은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을 미군정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화교는 중화민국정부에게는 미군정이 「포고 제2호」의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 자는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하다”는 내용을 철저히 지켜, 연합국 국민을 보호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당시에 화교도 자신이 연합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음을 또한 시사하고 있다.

미군이 화교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완전히 기피한 것은 아니었다. 화교를 폭행한 조선인을 군정재판에 처한 일도 있었다.<sup>18)</sup> 그러나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미군정과 중화민국정부, 한국 모두 한국의 화교배척사건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고, 한중 친선을 중시하는 자세를 취했다. 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 삼자의 연대는 불가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교

18) 〈中央日報〉, 1946. 11. 12. (『韓國僑務案 1946. 11-1948. 6』, 마이크로필름: 0595)

배척사건으로 그 연대에 금이 가는 것은 삼자가 모두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화교도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교들의 대표단체였던 중화총상회는 미군의 요구에 따라 “조선에 있는 화교는 조선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중국에 있는 조선인도 호의적으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sup>19)</sup>

미군정과 화교의 정치적인 관계를 종합해보면, 미군정은 화교에 대해 연합국 국민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비록 한중친선이라는 이름하에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연합국 국민이라는 기본방침은 준수하고 있었다. 화교들 또한 자신들이 연합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 (2) 경제적 측면

해방을 맞이한 한국경제에 대한 미군정의 기본방침은 신속히 일분경제권에서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SWNCC176/8」에 나타나 있는 미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본방침은 한국을 자주독립국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 한국의 정치·경제 생활에 대한 일본통치를 점진적으로 일소해 한국을 일본의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데 있었다.<sup>20)</sup> 최고지령인 「SWNCC」문서의 내용을 미군정은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면이 많았으나, 일본경제권에서 분리라는 경제방침은 비교적 엄밀히 적용되었다고 이종원(李鍾

19) 「華僑壓迫云云은浪說」, <동아일보>, 1946. 11. 20.

20) 「SWNCC176/8」 제3조. (미국무성, 1984: 85)

元)은 지적하고 있다.(李鍾元, 1993 : 17)

〈표 1〉과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식민지시대의 조선의 무역은 일본에 종속된 상황이었다. 1944년을 예로 들자면 조선의 대일본수출은 전체의 79.26%를 차지하고, 대일본수입은 전체의 80.47%를 차지했다. 이러한 한국경제를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미군정은 수출입, 즉 대외무역에 통제를 가하게 된다.<sup>21)</sup> 1946년 1월 3일에 「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을 발표해 군정장관 또는 정식대리자의 허가 없이는 한국과 타지역 사이의 화물 또는 재산 등의 운수를 금지했다.(조선은행조사부, 1948 : II-44-45) 1946년 7월 4일에는 「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를 발표해 면허를 가진 자만이 외국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sup>22)</sup>

미군정이 무역을 통제하며 일본과의 무역을 배제하자, 중국·홍콩과의 무역액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표 1〉과 〈표 2〉 참조) 1946년에는 중국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약95%를 차지할 정도였다.<sup>23)</sup> 이것은 미군정의 일관된 경제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해방 후 한국내 혼란과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임기

21) 「SWNCC176/8」 제11조에서 미국은 한국의 경제활동 통제를 미군정에게 제시하고 있다.(미국무성, 1984: 93-96).

22) 이 제도는 무역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외무역의 직접적인 통제효과를 얻기 위하여 무역업자의 능력과 자격을 엄격히 심사한 다음, 소정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무역업의 허가증을 발부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1946년 7월 12일에 「외국무역규칙」 제1호와 제2호가 발표되면서 실시되었는데, 면허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요금과 각종 양식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무역이 가능한 개항장으로는 인천·군산·부산·목포·목포가 지정되었다. 면허신청은 1946년 8월에 시작하여 1947년 8월 25일 상공부령 제1호 「외국무역규칙」이 발표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기간 중 면허를 허가받은 업자는 한국인이 528명, 중국인(화교)이 15명이었다. 이 면허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폐기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무역업자가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가 채택되었다.(한국무역협회, 1972: 219-220; 조선은행조사부, 1948: II-78-79, II-121).

〈표 1〉 조선·남한의 지역별 수출액

1940~1948년, 단위: 천원

연도	중국	홍콩	만주국	일본	기타	총액
1940	39,160 (4.13%)	303 (0.03%)	147,033 (15.51%)	741,424 (78.23%)	59,049 (6.23%)	947,809
1941	42,145 (4.33%)	273 (0.03%)	131,131 (13.47%)	788,733 (81.05%)	10,916 (1.12%)	973,198
1942	42,405 (4.49%)	—	144,793 (15.33%)	752,287 (79.63%)	5,237 (0.55%)	944,722
1943	47,646 (6.76%)	330 (0.05%)	135,784 (19.26%)	512,907 (72.75%)	8,340 (1.18%)	705,007
1944	35,020 (3.81%)	90 (0.01%)	151,027 (16.42%)	728,836 (79.26%)	4,629 (0.50%)	919,602
1945	25,454 (35.90%)	—	45,444 (64.10%)	?	0 (0%)	70,898
1946	38,863 (81.41%)	—	—	8,874 (18.59%)	0 (0%)	47,737
1947	255,224 (22.97%)	465,405 (41.89%)	—	—	390,504 (35.14%)	1,111,133
1948	179,496 (2.49%)	5,501,371 (76.45%)	—	1,094,636 (15.21%)	420,244 (5.84%)	7,195,747

주: 1940년부터 1944년까지는 분단되기 전인 조선 전체의 통계이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는 남한만의 통계이다.

자료: 1940-1944: 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경제년감』, p.III-44~45.

1945-1948: 조선은행조사부, 1949, 『경제년감』, p.IV-52~53.

〈표 2〉 조선·남한의 지역별 수입액

1940~1948년, 단위: 천원

연도	중국	홍콩	만주국	일본	기타	총액
1940	?	?	?	1,335,716	200,651	1,536,367
	?	?	?	(86.94%)	(13.06%)	
1941	38,833	76	73,945	1,360,994	45,491	1,519,339
	(2.56%)	(0.01%)	(4.87%)	(89.58%)	(2.99%)	
1942	29,257	46	83,415	1,374,475	3,691	1,490,884
	(1.96%)	(0.00%)	(5.60%)	(92.19%)	(0.25%)	
1943	37,800	—	146,922	1,135,699	27,254	1,347,675
	(2.80%)	—	(10.90%)	(84.27%)	(2.02%)	
1944	26,555	21	158,894	769,179	1,246	955,895
	(2.78%)	(0.00%)	(16.62%)	(80.47%)	(0.13%)	
1945	57,146	7	64,114	?	902	122,169
	(46.78%)	(0.01%)	(52.48%)	?	(0.74%)	
1946	159,205	—	—	8,054	1,147	168,406
	(94.54%)	—	—	(4.78%)	(0.68%)	
1947	672,279	148,056	—	10,361	788	2,088,125
	(32.20%)	(7.09%)	—	(0.50%)	(0.04%)	
1948	1,214,972	1,396,521	—	461,583	5,784,381	8,857,457
	(13.72%)	(15.77%)	—	(5.21%)	(65.31%)	

주 : 1940년부터 1944년까지는 분단되기 전인 조선 전체의 통계이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는 남한만의 통계이다.

자료 : 1940-1944: 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경제년감』, p.III-44-45.

1945-1948: 조선은행조사부, 1949, 『경제년감』, p.IV-52-53.



응변식 대응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李鍾元, 1993 : 17-18)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해방 후 중국·홍콩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한국화교에게 유리한 무역상황이 만들어졌다.<sup>24)</sup>

식민지시대 말기에 접어들면서 화교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서 화교의 경제력은 쇠퇴해갔다. 그러나 해방 후 미군정은 화교를 연합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경제활동에 일체 규제를 가하지 않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화교들은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중국과의 무역네트워크를 이용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었다. 당시의 한국상인은 화교와 경쟁이 가능한 중국무역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정희, 2001 : 8)

그러나 한국화교가 처음부터 대중국무역에서 중심적인 활약을 했던 것은 아니다. 해방 후 대중국무역이 성황을 이루자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무역상인이 몰려들었다. 한국화교는 처음에는 그들의 안내자 역할을 했으나, 점차 독립하면서 홍콩상인과 대등한 세력을 지니게 되었다. 홍콩상인은 중국에는 본점을, 한국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와 반대로 한국화교상인은 한국에 본점을 설치하고 중국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치했다.(조선은행조사부, 1949 : II-58) <표 3>에 표시한 13개 무역상은 인천과 서울에 본점을 둔 대규모 화교무역상이다. 13개 무역상사가 1948년 올린 수출액은 한국 총수출액의 16%, 중국·홍콩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그리

23)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는 주로 공업원료·생고무·염료·섬유제품·명품·유리·종이 등이었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주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 소기축·모피 등이었다고 한다.(이정희, 2001 : 8).

24) 홍콩은 중개무역지의 역할이 담당하고 있었다. 홍콩을 통해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물품이 한국에 수입되고, 한국의 물품이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수출되었다. (한국무역협회, 1972: 228)

〈표 3〉 주요 화교무역상의 무역실적

1948년, 단위: 원

화교상사명	본사소재지	수입액	수출액
萬聚東	인천	416,450,245	248,804,240
啓中貿易	인천	284,297,698	93,243,194
互惠貿易	인천	331,658,163	196,954,437
正興德	인천	204,717,215	157,293,440
益昌盛	인천	58,191,109	24,983,900
仁昌公司	서울	296,671,805	282,199,033
福隆祥	인천	8,691,840	2,928,000
益泰東	인천	9,621,155	8,144,368
廣泰成	인천	35,938,206	6,070,210
僑服務	인천	141,119,942	86,292,840
天德洋行	인천	39,272,426	36,431,630
中韓貿易	인천	34,742,400	9,460,800
南方華僑	인천	4,918,780	803,880
합계	—	1,866,290,984	1,163,609,972

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1949, 「재한화교의 경제적세력」, 『경제년감』, p. II-60.

고 이들 13개 무역상사의 수입액 또한 한국 총수입액의 21%, 중국·홍콩 수입액의 71%를 점할 정도로 큰 액수였다. 이외에 소규모의 화교무역상을 더한다면 화교무역상이 대중국무역에서 점하는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은행조사부에 의하면 당시 무역총액의 70% 이상을 화교자본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선은행조사부, 1949: II-58) 당시의 한국화교의 인구는 1945년에 12,648명(박은경, 1986: 118), 1947년에 12,088명(『韓國僑務案1948, 1-12』, 마이크로필름: 0889), 1948년에 17,433명(한중문화협회편집실, 1949: 60-61)이다. 비록 인구는 소수이지만 그 자본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화교무역상은 한국에 수입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마련하고, 시세를 파악해가며 물품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 또한 독자적인 판매망을 통해 물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중소무역상들은 화교잡화상을 통해 수입물자를 판매했다.(이정희, 2001: 10) 이로 인해 화교잡화상도 호황을 누리게 된다. 1948년 당시 화교의 직업을 살펴보면, 음식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잡화상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4〉 참조) 당시의 화교 회사는 무역회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7위의 회사업은 무역회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업은 비록 종사하는 인원수는 많지 않으나 화교사회내에서 가장 재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화교의 각종 업종들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와 같이 서울지역의 화교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설립년도를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해방 이후에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sup>26)</sup> 이 시기의 화교경제는 무역업을 중심으로 잡화상, 음식업 등 다른 직업들도 번창하게 되는데, 음식업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대중국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유

동적인 중국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중국인을 주고객으로 하는 음식점도 이와 더불어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의 적산가옥의 불하도 화교자본을 확대하는 데 공헌했는데, 1948년 말 전체 화교 가옥의 21%는 적산가옥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1947년 4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통과된 소규모 사업체의 처리원칙에 따라 화교가 점유한 음식점, 주택, 무역회사 등의 소규모 귀속 사업체의 불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정희, 2001 : 6-7) 그러나 화교경제의 대들보는 역시 무역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교와 미군정의 경제적인 관계를 종합해보면, 미군정의 한국경제를 일본에서 분리시키려는 정책으로 인해 대중국무역이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한국화교에게 유리한 무역환경이 조성되었다. 화교경제는 무역업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미군정이 화교의 경제활동에 일체 규제를 가하지 않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 25) 중한성중화상회에서는 상회유지와 학교경영을 위하여 화교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월회비를 등급별로 나누어냈다. 1등급은 3,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 2등급은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 3등급은 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 4등급은 50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 그 이하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이 내는 월회비는 상회비가 900원 학교비가 180원이고, 2등급은 상회비 720원 학교비 140원, 3등급은 상회비 540원 학교비 100원, 4등급은 상회비 360원 학교비 60원, 5등급은 상회비 180원 학교비 40원이다. 1948년에 한성중화상회의 월회비 납부내역을 보면 1등급에 분포된 직업 중 무역상이 가장 많았으며, 화교 직업의 1위를 차지한 음식점은 4등급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었다. 이 것으로 무역상 종사자는 많지 않으나,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조선은행조사부, 1949: II-65) 또한 1등급이 납부하는 월회비는 미군정 공무원 평균월급인 2,560원의 42%에 달하는 교액이라고 이정희는 지적하고 있다.(이정희, 2001:12)
- 26) 1948년 화교 총인구의 약 40%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화교인구는 6,902명이고 1,252세대이다.

〈표 4〉 화교의 직업

1948년 말, 단위: 명

	직업	종사자수	%
1	음식업	4,632	27.31%
2	잡화상	3,148	18.56%
3	농업	1,938	11.43%
4	토목	480	2.83%
5	대장 일	302	1.78%
6	노동	265	1.56%
7	회사업	189	1.11%
8	기와 석공	145	0.86%
9	양조업	132	0.78%
10	의약업	119	0.70%
11	공무원	97	0.57%
12	교원	44	0.26%
13	무직	5,468	32.24%
	합 계	16,959	100.00%

주 : 이 통계는 당시의 중화민국영사관의 통계를 기초로 한 것이다. 또한 이 표의 공무원은 영사관 등 중화민국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교원은 화교학교의 교원을 말한다.

자료 : 한중문화협회편집실, 1949, 「재한화교개황」, 『한중문화』, 1949. 3, p.61.

〈표 5〉 서울지역의 화교사업 설립시기

단위: 세대

직업	해방 이전	해방 이후	현재 수
음식점	175	157	332
집화상	17	27	44
무역상	4	11	15
철공업	5	2	7
약종업	6	2	8
양조업	1	4	5
제화업	4	—	4
이발업	2	3	5
토목업	3	6	9
제봉업	3	13	16
제과업	1	5	6
야채업	1	1	2
여관	1	1	2
의원	—	1	1
기외제조업	—	2	2
목욕업	1	3	4
안경상	1	2	3
합계	225	240	465

주: 이 통계에는 영등포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수'는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의 합계를 통해 재산출한 것이다.

자료: 조선은행조사부, 1949, 「재한화교의 경제적세력」, 『경제년감』, p.II-60.

### 3. 중화민국정부와의 관계

해방 후 조선은 일본통치에서 해방되지만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분단의 그림자가 어둡게 비치고 있었다. 한편 중국에서도 1946년 7월 본격적으로 국공내전이 재개되어 분단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은 1949년이고, 이 시기는 아직 중화민국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위정자의 위치에 있었고, 연합국 회원국으로 국제적으로 정통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중화민국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민대회에 참석한 한국화교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당시의 한국화교가 어떻게 중화민국정부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분석해보고 싶다. 또한 중화민국정부가 어떻게 화교사회에 침투해서 통제해갔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 (1) 국민대회와 한국화교의 의견서

중화민국정부가 중국대륙에 있었을 때 두 번의 국민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두 번의 국민대회는 중화민국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1946년 11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개최된 ‘제헌국민대회’로 중화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두 번째는 1948년 3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된 ‘제1회 국민대회’인데, 중화민국의 총통과 부총통 선출을 목표로 한 대회로 장제스가 총통에 선출되었다.

한국화교는 당시 중화민국정부가 규정한 교민국민대표선거를 거쳐 조선지역 교민대표 자격으로 두 번의 국민대회에 참석해 제헌과정과 총통선출과정에 참여했다.<sup>27)</sup> ‘제헌국민대회’ 때는 주셴지오(周

慎九)가 조선지역 대표로 선출되어 참석했는데, 그는 그것을 기회로 한국화교사회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僑務案1946.11-1948.6』, 마이크로필름 : 0619-0623, 0627-0631)

- ① 외교부는 류위만(劉馭萬)과 수명공(宿夢公)을 주한총영사와 부영사로 파견할 예정인데, 하루빨리 한국에 부임시켜 화교를 위로할 것.
- ② 식민지시대 말기 일본이 화교의 토지소유와 가옥매매권을 취소했기 때문에 한국인·일본인의 명의로 토지와 가옥을 구매하는 화교가 많았다. 정부는 한국측과 협의해 화교의 명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
- ③ 서울영사관 앞에 공터를 중화상회에 임대하고 사무소와 상점을 건설해 그 수입으로 화교소학교의 경비를 보조할 것. 또한 왕징웨이정권의 명의로 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한국정부와 교섭할 것.
- ④ 1931년 7월 만보산사건 때 일어난 화교배척사건의 피해보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할 것.

27) 중화민국은 화교를 교민, 즉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라 부르며 화교들의 국민대회 참가를 보장하고 있었다. 화교는 거주지역에서 교민국민대표선거를 거쳐 교민국민대표를 선출한 후 참가할 수 있었다. 조선지역의 교민국민대표의 정원은 1명이다. '제헌국민대회' 때는 1936년 중화민국 헌법초안(五五草案)이 공포된 후 제헌국민대회를 열기 위해 7월부터 교민국민대표선거를 실시했지만, 중일전쟁의 발발 등 국난이 이어져 결국 1946년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선거를 실시했다. '제1회 국민대회' 때는 1947년 1월에 발표된 「國民代表·立法議員·監察委員選舉罷免辦法」에 준해서 7월부터 국민대회가 열리는 1948년 3월까지 교민국민대표선거가 실시되었다. 교민대표선출에 관해서는 楊建成, 1992, 『華僑參政權之研究—中華民國僑居國外國民對祖國政治參加與實例之統計分析』, 臺北: 文史哲出版社와 僑務委員會, 1957, 『僑務二十五年』(臺北) 참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①류위만 주서울총영사는 이미 부임의 길에 올라 있다. ②③은 류위만이 부임 후 처리하게 한다. ④의 화교배척사건 배상금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표식에 기재한 후 서울총영사관을 통해 제출하라”고 회답했다.(『韓國僑務案 1946.11- 1948.6』, 마이크로필름 : 0624-0645)

쑤셴지우가 ‘제헌국민대회’ 참석과 더불어 한국화교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을 때는 총영사가 아직 한국에 부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사관을 통해 화교의 요구를 중화민국정부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47년 2월 주한총영사관 개관 후에도, 한국화교는 ‘제1회 국민대회’ 참가를 통해 총영사관을 거치지 않고 화교사회의 현황을 보고하고 자신들의 요구와 의견을 중앙정부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

‘제1회 국민대회’ 때는 왕싱시(王興西)가 조선지역 교민대표로 선출돼 참석했다. 그는 1947년 12월에 귀국한 후 「조선개황 보고서 및 의견서」(아하 「의견서」로 약칭)를 외교부에 제출했다.<sup>28)</sup> 「의견서」에 기록된 한국화교의 요구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韓國僑務案 1948.1-12』, 마이크로필름 : 0901-0902)

- ① 신속히 북한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화교를 보호할 것.
- ② 신속히 인천·부산영사관을 회복할 것.
- ③ 신속히 앤타이(烟台)에 교무국(僑務局)을 설치할 것.

28) 1948년 1월 16일자로 제작된 이 「의견서」(『朝鮮概況報告書及意見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서문. 제2장 조선개황 1정치, 2경제. 제3장 한국화교개황 1교육, 2농원, 3상업, 4기타. 제4장 영사관 업무개요 1교무, 2외교. 제5장 일반교민 의견. (『韓國僑務案 1948.1-12』, 마이크로필름:0884).

- ④ 화교학교를 보조할 것.
- ⑤ 신문사나 출판사 등 문화기관을 설치해 교민의 지식수준을 높일 것.
- ⑥ ‘농민식자반’, ‘상인식자반’, ‘부녀식자반’의 설립을 제창할 것.
- ⑦ 교민의 ‘귀국시찰단’(교육·농업·상업) 결성에 협력할 것.
- ⑧ 화교자제의 귀국 진학과 취업에 적극 협력할 것.
- ⑨ 한국에 국립은행지점을 설치해 대출을 시행하고 화교의 농·공·상업을 추진할 것.
- ⑩ 중국 한국간의 통항·통신이 회복되도록 미군정과 교섭할 것.

이러한 화교의 요구에 대해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 화교의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①②는 외교부가 기획해서 처리한다. ③은 전란이 계속되고 있어 치안이 회복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④는 화교학교 보조를 위해 본년도 예산증가를 신청할 것이다. ⑤는 총영사관이 화교상회와 유력 화교인사를 소집해 모금된 금액으로 화문(華文)신문사를 창간한다. ⑥은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처리한다. ⑦은 정부가 여비를 지급한다. ⑧은 귀국진학을 희망하는 화교학생을 제1·2 화교중학, 제1·2 교민사범학교, 기남대학(暨南大學) 등에 수용한다. 그러나 소학교 졸업자는 현지의 화교중학교 진학을 원칙으로 한다. ⑨는 실정을 고려해 재정부가 결정한다. ⑩ 한국과 중국의 운수곤란 문제에 관해서는 화교의 배를 이용하고, 한국과 중국을 전문으로 운행하는 배는 면허증을 배부해 물자운송의 편의를 봐주고, 교민의 귀국물자는 주한총영사관과 중화상회의 증명을 받게 할 것을 제안한다. (『韓國僑務案 1948.1-12』, 마이크로필름: 0980-0983)

위와 같은 교무위원회의 공문에서, 국공내전이 한창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정부가 화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화교가 중화민국 중심으로 화교사회를 편성시키려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화민국정부가 위에서부터 한국화교사회를 통합하려는 면도 있었지만 한국화교가 밑에서부터 중화민국정부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의견서」에는 외교관원을 증파할 것, 미군정이 「포고 제2호」를 철저히 지켜 연합국 국민을 보호하게 할 것, 적산가옥의 사용허가를 받은 화교가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미군정과 협의할 것 등, 영사관 업무에도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신속히 잃어버린 국토의 되찾아 국토의 완전을 지킬 것, 조선독립을 적극 지원하고 조선정부의 수립을 촉진할 것, 군대를 강화해 공산당을 토벌할 것 등, 외교정책과 중화민국 국내의 군사·정치에도 의견을 제시했다.(『韓國僑務案 1948.1-12』, 마이크로필름 : 0983-09991)<sup>29)</sup> 중화민국정부도 화교의 국민대회에 참석을 계기로 현지 화교사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화교는 국민회의의 참가를 통해 영사관 진출 이전부터 중화민국정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화교는 중화민국역사상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제헌국민대회’와 총통을 선출한 ‘제1회 국민대회’에 참석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중화민국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29) 그러나 영사관업무와 외교, 국내군사·정치에 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현재 필자가 가진 자료로는 알 수가 없다.

## (2) 자치구조조직의 형성

왕징웨이정권 영사관관원들이 중국으로 송환된 후 영사관은 폐쇄되어 영사관업무는 미군정 외무서 중국과와 중화총상회에서 대행하고 있었다.<sup>30)</sup> 1947년 2월 5일 류위만 주한총영사가 한국에 도착해 2월 10일 총영사관이 서울에 개관되었다. 그 후부터 총영사관에서 화교를 관리하고 화교업무를 진행하게 된다.<sup>31)</sup> 류위만 주한총영사의 부임은 한국화교사회에서 더욱 중화민국의 세력을 확고히 했다. <표 6>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그는 한국을 48개의 화교자치구로 분할해 각 자치구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서울에는 ‘남한자치총회’를 설치했다. 10가구가 1갑(甲)을 형성하고, 10갑은 1보(保)를 형성하여, 몇 개의 보가 합쳐져 하나의 자치구를 형성했다. 각 갑장·보장·자치구장은 자치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화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華僑史編纂委員會, 1958 : 118) 자치구는 1960년대 ‘화교협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조직으로, 한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화교간의 분구의 조정, 화교증 발급, 호적 발행, 혼인신고서·출생신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류주한총영사에 의해 이러한 조직화 된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한국화교는 조직적으로 중화민국정부에게 통합되어갔다. 모든

30) 「看板매고들아간汪政權領事館」, <동아일보>, 1946. 11. 30.

31) <漢城日報>에 의하면 그 동안 영사관업무를 대행해온 중화총상회는 친목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중화총상회는 영사를 맡은 기쁨을 전체화교를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의 기쁨이라니오 정말 아버지를 오랫동안 모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영사의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新領事, 華僑의歡喜, 使館十日開館, 各地華僑參集華商歡迎準備」, <漢城日報>, 1947. 2. 7.

〈표 6〉 해방 초기의 한국화교 자치구

자치구명칭		자치구명칭	
서울·경기도	1 남한자치총회	충청남도	25 대전화교자치구
	2 서울화교자치구		26 천안화교자치구
	3 영등포화교자치구		27 조치원화교자치구
	4 수원화교자치구		28 보령화교자치구
	5 안성화교자치구		29 서신화교자치구
	6 인천화교자치구		30 강경화교자치구
강원도	7 강릉화교자치구	31 홍성화교자치구	
	8 춘천화교자치구	32 온양화교자치구	
	9 원주화교자치구	33 부여화교자치구	
	10 북평화교자치구	34 예산화교자치구	
	11 대구화교자치구	35 당진화교자치구	
	12 경주화교자치구	36 공주화교자치구	
경상북도	13 금천화교자치구	전라북도	37 전주화교자치구
	14 포항화교자치구		38 군산화교자치구
	15 부산화교자치구		39 정읍화교자치구
	16 진주화교자치구		40 이리화교자치구
	17 미산화교자치구		41 무주화교자치구
	18 통영화교자치구		42 광주화교자치구
충청북도	19 옥천화교자치구	전라남도	43 목포화교자치구
	20 음성화교자치구		44 영광화교자치구
	21 영동화교자치구		45 송정화교자치구
	22 괴산화교자치구		46 순천화교자치구
	23 충주화교자치구		47 여수화교자치구
	24 청주화교자치구		48 제주화교자치구
	25 제천화교자치구		

주: '남한자치총회'는 한국전쟁 이후 '화교반공구국연합회'와 합병해 '한국화교자치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료: 華僑史編纂委員會, 『華僑志—韓國』, 1958, 113, p120쪽.

화교가 자치구에 종속됨에 따라 자치구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전역의 화교에게 중화민국정부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 이후 이 자치구 조직은 한국 전역의 화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로 발전해 간다. 또한 이 자치구조직은 화교학교 설립기반이 되기도 했다.<sup>32)</sup>

#### 4. 한국인과의 관계

여기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성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당시의 화교와 한국인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과 화교의 관계에서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분열을 보이며, 정치적으로는 ‘협력자’의 이미지가 강조되지만 경제적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간상(奸商)’과 ‘경쟁자’의 이미지가 강조되는 점이다.

##### (1) 정치적 관계

1919년 4월 13일 한국임시정부(이하 임정으로 약칭)가 상하이에서 수립된 이후, 중화민국정부는 임정의 독립활동과 재정을 지원해왔다. 제2차세계대전의 종식이 가까워오자 중화민국정부는 미국이 임정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정을 승인하지는 못했지만 임정승인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權寧俊, 2002 : 164-174)

32) 이와 관련해서는, 양은미, 「韓國における華僑學校教育の歴史: 1945年以後を中心に」, 『華僑華人研究』 2004, 9(창간호)를 참조.

해방 후 한국에서는 중화민국정부와 임정의 관계, 중화민국정부의 한국독립 지지로 인해 중화민국정부에 대한 여론은 무척 우호적인 것이었다. 한국독립을 위해 중화민국정부의 협력이 중요시되면서 여론에서는 한중친선이 강조되었다. 그로 인해 한국화교의 중화민국정부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이 중시되었고, 화교와 한국정치가의 관계 또한 무척 우호적이었다. 한국에서 임정요원은 해외 민족주의 운동의 리더로서 명망이 높았는데, 한국화교는 특히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45년 10월 16일 임정의 미국대표였던 이승만이 귀국하고, 11월 23일 김구와 그의 지지자들도 귀국했다. 김구가 서울에 도착하자, 화교대표는 김구를 방문했다.<sup>33)</sup> 그리고 이승만은 한국 순회 중에 천안화교상회회장을 방문해 한중친선을 역설했다.<sup>34)</sup> 또한 한중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한중협회가 설립됐는데 김구가 총재, 이승만과 장제스가 고문을 맡았다. 1946년 1월에는 한중문화협회가 발족되어 한국정치가와 화교지도자들이 참여했다.<sup>35)</sup> 그리고 미군정 민정장관이었던 안재홍이 <한성일보> 사장을 맡고 있었을 때는 많은 한중친선행사를 거행하고 <한성화문일보(漢城華文日報)>(후에 <漢城中華日報>로 바뀜)를 발행했다.<sup>36)</sup> 류위만이 주한총영사로 부임했을 때도 한중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외교협회와 한중협회는 공동으로 부임축회를 거행했다.<sup>37)</sup> 또한 여한중화상회연합회(旅韓中華商會聯合會)가 결성되자 이승만과 김구, 이청천 등이 초대되어 한중친선환담

33) 「華僑代表金九主席을訪問」, <동아일보>, 1945. 12. 5.

34) 「李博士, 天安華僑會見」, <조선일보>, 1946. 4. 20.

35) <한성일보>, 1946, 11, 26.

36) <한성화문일보>는 1946년 12월 20일에 발간됐음. (이정희, 2001: 5); <한성일보>, 1946. 12. 22.

37) 「在京中領事歡迎會外協과韓中協會主催로」, <동아일보>, 1947. 2. 12.

회가 열렸다.<sup>38)</sup> 왕싱시가 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날 때도 한중협회 주최로 환송회가 열려, 한중친선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했다.<sup>39)</sup>

한국에서 신탁통치반대 여론이 형성되자 화교들에게도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독립정부의 수립을 추진시키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었는데, 한국화교도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 신탁통치에 반대는 화교에 대해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살펴보자.<sup>40)</sup>

“美英蘇三國의 背信的인 朝鮮信託統治를 反對코 國內各機關은 一齊히發起하여大示威運動을展開하고 잇거니와 우리 自主獨立의 眞正한 同盟者인 在韓中國人들도 우리의 함께 自體休業을하고 잇는데……(이하 생략)”

이렇듯 화교는 “조선 자주독립의 진정한 동무요 원조자”로 묘사되었다.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 화교가 취한 구체적인 방법은 장제스와 정부에게 조선독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화교지도자들이 참석한 한중협회에서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장제스에게 보냈다.<sup>41)</sup> 인천화교대표들도 류충영사를 방문해 “조선독립의 급속 달성을 원조하라”는 메시지를 장제스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sup>42)</sup> 왕싱시의 「의견서」에도 조선독립의 원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38) 「朝中親善의交歡, 六萬華僑總商會發足」, <한성일보>, 1947. 5. 18. 「中華商會聯合會에서 李博士金九先生招待」, <동아일보>, 1947. 5. 18. 영사관업무를 대행했던 중화총상회가 총영사의 부임으로, 여한중화상회연합회라는 친목단체로 거듭난 것으로 추정된다.

39) 「在韓華僑代表十四日回國」, <동아일보>, 1947. 12. 10.

40) 「華僑도同一步調, 韓中協會서蔣主席에게메시지」, <조선일보>, 1946. 1. 4.

41) 「華僑도同一步調, 韓中協會서蔣主席에게메시지」, <조선일보>, 1946. 1. 4.



기재돼 있다.

1948년 8월 한국단독정부가 수립하기 전까지 한국화교는 조선독립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로 묘사되었다. 한중친선이 강조되면서 한국화교는 ‘협력자’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인과 화교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계는 부정적인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

## (2) 경제적 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한국화교의 경제력은 한국경제에 있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성장해 있었다. 이런 한국화교의 경제력은 국가건설을 앞둔 한국인에게는 경계할 대상이었다. 한국화교의 경제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민족자본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주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무역업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혼란시에 그들에게 무역을 허한다면 그들의 우세한 자본력으로 독점될 염려가 있다”<sup>43)</sup>며, 한국의 여론은 화교에게 무역행위를 허가하는 것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중국무역이 한국무역의 중심이 되고 화교가 거기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우리 무역은 완전히 화상(華商)들에 의해서 농락되고 있다”<sup>44)</sup>며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화교들은 밀무역을 통해서도 자본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1946년

42) 「朝鮮獨立援助를, 仁川華僑·蔣主席에要請」, 〈동아일보〉, 1947. 3. 8.

43) 「中國人에貿易許可는不可」, 〈조선일보〉, 1946. 10. 9.

44) 「貿易 거이華商이獨占」, 〈동아일보〉, 1948. 10. 24.

부터 1948년까지 적발된 밀수출건수는 160건으로 그중 37건(23.1%)이 화교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적발된 밀수입건수 463건 중 화교는 85건으로 18.4%를 차지했다.(조선은행조사부, 1949: II-61) 화교의 이러한 밀무역에 관해서도 여론은 강한 질타를 던졌다. “금은 조선경제 재건의 중요한 통화의 보장이 될 것”인데, “중국인밀무역에 금은이 다량 유출”되고 있고,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막중한 죄악”이라고 전했다.<sup>45)</sup> 화교들이 적산가옥불하로 자본이 축적되자 거기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일본가옥과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매계약을 작성하여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sup>46)</sup>고 보도했다. 또한 화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천 상가는 화교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격”이라고 논하며 인천의 적산가옥중 9분의 1이 화교소유이고 화교의 적산부정매매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sup>47)</sup>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이민자가 증가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조선인이 증가하는 이때에 중국인 이민자까지 증가하게 되면 민생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sup>48)</sup> 또한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마약밀매와 금수품(禁輸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정계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하며 중국인의 불법입국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sup>49)</sup>

45) 「中國人密貿易에 金銀이多量流出, 賣國의密商處斷緊急」, 〈조선일보〉, 1946. 10. 30.

46) 「孤島서物物交換, 痛嘆할密貿易内幕」, 〈조선일보〉, 1946. 10. 30.

47) 「主客顛倒의仁川, 商街敵産은華商이거이占有」, 〈조선일보〉, 1948. 10. 13.

48) 「朝鮮은樂土란말인가, 仁川中國人移民上陸急増」, 〈조선일보〉, 1947. 10. 17.

49) 「經濟攪亂하는 中國人不法入國을嚴重圍束」, 〈조선일보〉, 1948. 7. 9.

이처럼 한국화교의 경제적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한국인과의 경제적 관계 또한 경쟁과 경계의 관계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화교의 이미지는 해방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식민지시대인 1920년대 화교가 조선사회에서 무역업, 포목업, 야채 경작과 판매로 부를 축적하게되자 당시의 조선여론은 화교상인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상(奸商)’으로 표현하고 있다.(백영서, 2000c : 155-156) 같은 시기 화교노동자가 증가하자 조선여론은 조선노동자의 ‘경쟁자’로 화교노동자를 묘사하고 있다.(백영서, 2000c : 156-161) 이러한 ‘간상’과 ‘경쟁자’의 이미지는 해방 후에도 계승되었다.

결국 한국정부수립 후 화교경제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높아져 한국은행조사부에서는 화교자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화교의 경제적 세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첫머리에 화교경제력에 대한 경계심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조선은행조사부, 1949 : II-56)

“그들 재한화교는 8.15 일본패망을 호기로 금일에 이르기까지 3년간 한국의 복잡한 정치동향을 도외시키고 경제적으로 혼란된 간극(間隙)을 이용하여 그들의 경제적 기반 축성에만 급급하여 온 결과 드디어 한국경제계에서 소홀히 볼 수 없는 기반을 이룩하고야 말았다.”

화교경제력을 이 이상 관망하게 되면 한국경제의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이승만은 “민족자본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상이 협력하여 화상(華商)의 경제 농단을 배제”해야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하게 된다.<sup>50)</sup>

앞에서 거론한 왕지탕사건과 같은 해방 초기에 발생한 화교배척

사건들은 당시의 화교 경제력성장에 대한 경계심, 해방 이전에 형성된 화교의 부정적인 이미지, 중국에서 억압을 받았던 조선인들의 울분 등이 결합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화교가 경제적으로 부여받은 ‘간상’과 ‘경쟁자’의 이미지는 한국정부수립 후 그 경제력이 쇠퇴해도 계속해서 한국사회에서 이어져간다. 한국화교의 정치적인 이미지 또한 연합국 국민이라는 지위는 사라지게 되지만 냉전체제하에서 반공의 협력자라는 이미지로 계승된다. 화교와 한국인의 관계 또한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의 분열은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검토한 한국화교와 미군정·중화민국정부·한국인의 관계를 토대로 당시의 한국화교사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당시 한국화교는 분명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다. 미군정기의 한국화교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첫째, 한국화교사회가 중화민국 중심으로 빠르게 편성되어가는 점이다. 물론 모든 한국화교가 중화민국정부를 지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념적으로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 서술한 한국화교의 역사를 토대로 분명한 것은 화교지도자들은 중화민국정부에 충성스러웠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50) 「國內商人協力하여 華商의經濟壟斷을排除, 大統領當面問題에言及, 民族資本確立緊急, 暴利輩는 嚴罰處斷」, 『東亞日報』, 1949, 12, 10.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소련군에 의해 점령당한 북한의 경우는 중화민국 세력이 침투하기 힘든 상황으로, 한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화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1947년부터 아시아에서도 미·소의 대립은 표면화되면서 한국 내에도 반공주의가 형성되고 있어, 1947년 말 국공내전이 공산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해도 소수집단인 한국화교가 위함을 무릅쓰며 공산당을 지지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앞의 <표 5>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시의 한국화교는 무역업, 음식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그 대부분이 상인이었다. 이것은 한국화교가 이념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집단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화교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높여줄 정부는 자신들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화민국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화교의 경제의 중심은 무역이었고, 무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화민국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화교에게도 유익했을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미군정기의 화교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군정하에서 중화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연합국 국민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합국 국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치적 지위의 상승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화교가 경제적으로는 한중무역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미군정이 연합국 국민으로서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연합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할 책임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화교의 ‘협력자’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한국인 사이에서도 정치

적 지위를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중화민국이 연합국 회원국으로 조선 독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화교의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를 보장해준 것은 미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한국화교의 경제력이 한국인의 경계대상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인은 정치적으로는 화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족자본 확립에 위협요소라는 판단하에 화교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미군정기 이후의 한국화교사회는 어떻게 변모되는가? 미군정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화교의 모습은 일변한다. 우선 정치적 지위가 하락하게 되는데, 연합국 국민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보장했던 미군정이 철수하고 한국(단독)정부 수립 후 더 이상 중화민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공내전의 패배는 중화민국정부의 국제적 지위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확립되면서 한국화교는 반공의 ‘협력자’라는 정치적 지위로 계승되게 된다.

또한 미군정기 이후 한국화교의 경제력은 급격히 쇠퇴하게 된다. 미군정기에 급속도로 확장된 화교의 경제세력은 중국의 공산화, 미국의 한국경제정책의 변화, 한국정부의 화교규제 정책, 한국전쟁의 발발로 다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중 한국화교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중국의 공산화일 것이다. 1949년 한국화교의 주요 무역지인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과의 왕래는 일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화교경제의 중심이었던 화교무역은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해방 직후 한국경제를 일본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미국은 1948년 이후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본거지로

삼는다는 구상을 본격화하면서, 한일 경제통합을 추진해간다. 한국을 반공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李鍾元, 1993: 30-32) 그 결과 1949년 4월 한일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일본과의 무역이 다시 회복되면서 대중국무역은 감소해간다. 그리고 한국정부 설립 후에는 화교에 대한 경계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화교상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그 하나의 예로서 한국전쟁 전에 내려진 「창고봉쇄령」을 들 수 있다. 「창고봉쇄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물자를 보관하면서 시세에 맞춰 물자를 방출해 판매해온 화교상인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 후 한국전쟁의 발발은 화교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화교의 경제력이 쇠퇴해도 ‘간상’과 ‘경쟁자’의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

한편 미군정 이후 한국화교와 중화민국의 관계는 더욱 더 긴밀해진다.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후 타이완으로 그 정부가 옮겨갔지만 한국화교의 지지는 변하지 않는다.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화교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는 과정을 직접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화교와 중화민국의 관계는 더욱 확고해진다.<sup>51)</sup> 한국전쟁 이후 냉전체제가 확립되고, 한반도와 중화민국의 분단이 고착화하면서 한국화교사회는 더욱 더 중화민국 중심으로 확립해간다.

51) 한국정쟁이 발발하자 한국화교는 중화민국의 명령을 받아 한국을 위해 첩보부대 40명을 포함한 200여명의 화교가 참전했다.

## 참고문헌

- 양필승·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 한국 화교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 왕은미, 2004, 「동아시아를 떠도는 한국화교의 정체성: 『한중일보』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국가 정체성」, 정문길 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이윤희, 2004, 「동북아 시대 인천 거주 화교의 인권 실태 및 정체성」, 『담론201』, 제6권, 제2호.
- 이재광, 2004, 「한국화교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화교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30집.
- 이재령, 2003, 「남경정부시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일보』(1929-1935) 기사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15집.
- 유인숙, 2002, 「근대 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중국인」, 『중한인문과학연구』, 제8집.
- 오명석, 2002, 「화교 교육과 젊은 세대의 문화적 감성」, 『당대비평』, 제19호 2002년 여름호.
- 왕춘식, 2002, 「한국 화교 2세의 질곡과 소망」, 『당대비평』, 제19호 2002년 여름호.
- 장수현, 2002,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 제19호 2002년 여름호.
- 장수현, 2001,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 제4호.
- 이정희, 2001, 「해방이후 한국화교 자본 축적과 그 의의(1945.8-1949)」, 한국경제공동학술대회발표논문.
- 백영서, 2000a, 「대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 백영서, 2000b, 「1949년의 중국: 동시대의 한국인 시각」,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 백영서, 2000c,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 속의 '동양':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 양필승, 2000, 「한국 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인권법』, 제3호.
- 전인갑, 1987, 「1920년대 신문·잡지언론을 통해 본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성격: 5·30운동에 관한 동아일보의 언론을 중심으로」, 『서울대동양사학과논집』, 제11집.
- 박은경, 1986, 『한국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 미국무성, 1984, 『해방 3년과 미국』, 돌베개.
- 강덕지, 1973, 「한국화교의 경제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석사논문.
- 한국무역협회, 1972, 『한국무역사』.
- 내무부치안국, 1956, 『미군정법령집 1945-1948』.
- 조선은행조사부, 1949, 「재한화교의 경제적세력」, 『경제년감』.
- 한중문화협회편집실, 1949, 「재한화교개황」, 『한중문화』.
- 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경제년감』.
- 楊建成, 1992, 『華僑參政權之研究—中華民國僑居外國國民對祖國政治參加與實例之統計分析』, 臺北: 文史哲出版社.
- 楊昭全·孫玉梅, 1991,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 華僑史編纂委員會, 1958, 『華僑志: 韓國』(臺北).
- 僑務委員會, 1957, 『僑務二十五年』(臺北).
- 慮冠群, 1956, 『韓國華僑的經濟』, 臺北: 海外出版社.
- 『韓國僑務案 1948. 1-12』, (중화민국정부 외교부 문서, 타이완 “國史館” 소장)
- 『韓國僑務案 1946. 11-1948. 6』, (중화민국정부 외교부 문서, 타이완 “國史館” 소장)

- 王思美, 2004, 「韓國における華僑學校教育の歴史: 1945年以後を中心に」, 『華僑華人研究』.
- 松田利彦, 2003, 「近代朝鮮における山東出身華僑: 植民地における朝鮮總督府の對華僑政策と朝鮮人の華僑への反應を中心に」, 千田稔・宇野隆夫 共編, 『東アジアと「半島空間」: 山東半島と遼東半島』, 思文閣出版.
- 權寧俊, 2002, 「抗日戰爭期における韓國臨時政府と中國國民政府との外交交渉: 韓國臨時政府の承認・獨立問題をめぐっ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14集.
- 李鍾元, 1993, 「戰後米國の極東政策と韓國の脫植民地化」,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 8 —アジアの冷戦と脫植民地』, 岩波書店.

**중화민국정부**: 이 시기는 중국이 아직 분단되지 않았고 중국정부는 중화민국정부를 일컫는 용어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였다. 그러나 1949년 중국분단 후 타이완으로 철수한 중화민국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구별해서 사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중화민국정부로 쓰기로 한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중국이라고 기술하겠다.

**The Society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from  
1945 to 1948 : Relation with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Republic of China government,  
and the Korean**

Wang, En-mei

Ph.D. candidate,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

A significant role is indicated in the ruling era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laying in the historic development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However, the lack of research on this

subject, especially in this specific period of time, is ubiquitously seen in the academic field. This dissertation is meant for achieving picturing and analyzing the historic flux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based on the center discussion of the relation amongst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Korean.

According to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Chinese and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we could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were seen as the nationals of the United Nations ;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urposely resisted the trade with Japan and motivated the intensive communication in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to increase the economy of overseas Chinese in rapid.

For overseas Chinese,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of ROC, the overseas Chinese in the south has been united into one society centered by ROC after the World War II. the national territory of Korea has been split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The reason was that the overseas Chinese participated in the inner politics through "National Congress" to enhance the solidarity to ROC ; on the other hand, the overseas Chinese autonomy area organized by the ROC embassy in South Korea united the overseas Chinese society systematically as well.

In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Chinese and the Korean, the Korean highly sustained awareness in the economical up rise of overseas Chinese ; however, both kept a fine relationship in politics. The two-sided comprehension of overseas Chinese economy and state of politics has been continu-

ing after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Key words)

Overseas Chinese, Society of Chines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Republic of China, China, the Korean, Cold Wa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 왕은미(王恩美)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박사과정. 대만 國立政治大學 학사,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석사. 주요 논문으로 “揺れ動き始めた韓國華僑のアイデンティティ 『韓國日報』に表れた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検討を中心に” 『一僑論叢』 第128卷3號, 2002, 9; “동아시아를 떠도는 한국화교의 정체성: 『한중일보』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국가 정체성”, 정문길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자성사, 2004; “韓國における華僑學校教育の歴史: 1945年以後を中心に”, 『華僑華人研究』 2004, 9; “若い世代の韓國華僑の言語教育・言語使用状況—『韓國漢城華僑中學』の言語教育と中等部生徒のリテラシー状況を中心に”, 『ことばと社會』, 2005년7월 출간예정.

E-mail : enmei810@yahoo.co.kr